

第227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附錄)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2月15日(金)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金敬天 위원

경기지역 학생배정 전산오류 관련

- 이번 학생배정 전산오류 사고는 작년 수능난이도 조절 실패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한 사고로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함께 정책담당자 전체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우려하게 만듭니다.
- 일차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업체의 과오에 원인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에 있습니다.
- 경기도가 학생수나 학교수가 많고 서울과 비교되어 정책시행에 다소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작년도 예지학원 화재참사나 인사청탁 비리 등으로 유달리 교육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교사들의 교육감에 대한 불신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 실무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감 내지 행·재정적 조치 등 특단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번에 재배정될 7721명의 학생 중 선호도가 낮은 학교로 재배정될 학생수가 2167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학부모들은 재배정학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고 처럼 아직 교실도 지어지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학교배정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의 교육정책 추진방향 관련

-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의 책 내용을 살

펴보면 부총리께서는 문민정부 이후 교육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과 7차 교육과정과 교원정년 단축의 무리한 추진 등을 들고 있는데,

-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등에 있어서는 다소간 정부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모토로 한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그 방향성에서 옳다고 봅니다.
- 특히 학운위 설치 운영 등을 비판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위적인 하향식 정책집행을 비판하듯이 학교현장의 의사결정도 학교장 등 윗사람들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학내구성원 즉, 학생·교사·학부모·학교장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민주당에서 개정 발의한 사립학교법도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학교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학운위 운영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함께 “법개정을 통한 학교현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평가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보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였는데,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7차 교육과정 추진에 대한 장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 위원

경기도 고교배정 혼란 문제

경기도 평준화 4개 지역(수원, 성남, 일산, 안양권)의 고교배정 오류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입생배정 취소사태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학교배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 하나 제대로 못하니 정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컴퓨터작업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배정내용 발표 전에 컴퓨터작업의 이상 유무를 재점검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고교평준화가 수도권으로 확대 실시된 첫해에 1년 넘게 준비해 온 학교배정업무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공직기강이 풀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8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사건의 진상을 명료하게 밝히고 책임자는 강력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컴퓨터업체를 덤핑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오래갈까 걱정입니다.

재배정이 일주일 이상 늦어져 학사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른 행정낭비도 클 것입니다.

게다가 부천에서는 신축공사가 한창인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전체 6층건물 중 4층까지 철골·콘크리트 공사만 끝낸 상태여서 이르면 올 11월께나 준공이 가능한 부천시 오정구 덕산고등학교에 올해 신입생 525명이 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도교육청과 부천시교육청의 변명이 다르던데 기관들 간의 의사소통도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진상을 철저히 가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배정 결과에 다시 한번 반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혼란과 후유증이 장기화되

지 않도록 재배정작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 문제

최근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장단점

우선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 정착되어온 고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 직후 美 군정의 서울중심 교육정책부터 시작하여 1968년까지 20여년 동안은 다양한 입시제도의 실험기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입시제도들의 장단점을 체험한 시기였습니다.

반복되는 입시제도의 실패와 입시부정의 만연은 결국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합리화하였습니다.

1968년 7월 15일 문교부는 1969학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바꾸겠다는 입시안을 발표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1974년부터는 고교평준화도 실시되었다.

이 조치에 대하여 입시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던 당시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은 적극적으로 지지와 환영을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이 그렇듯이 이 중등교육과정의 평준화제도도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 성장기유소년층의 정상적인 육체적·인지적 발달의 촉진, 교육격차 완화,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과열과외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실종이나 평준화로 인한 교과지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각 학교의 자주적 학교운영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중등교육과정의 평준화 정책이 추구했던 대중교육론적, 평등주의적 이상이 자율성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엘리트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평준화가 지닌 여러 단점도 ‘기회의 균등’이라는 평등권 실현을 향한 평준화의 취지가 지닌 목표가치를 퇴색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골격은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하는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폭등과의 연계성

일부에서는 강남지역 아파트값과 고교평준화제도를 직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언급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파트값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얘기가 전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파트값 폭등을 교육문제와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입니다.

아파트값 폭등은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과잉 수요 혹은 과소공급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남지역의 교육여건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강남으로 이동하려 한다는 점은 아파트값 급등의 여러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봅니다.

최근 강남지역 고교졸업생의 명문대 진학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고, 겉으로만 요란할 뿐 실체는 텅텅 빈 대치동의 수많은 학원교실들의 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값 폭등 문제 때문에 고교평준화제도라도마 위에 올린다면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아파트값 문제와 고교평준화 문제는 서로 고려해야 할 정책변수가 매우 다른 별개의 정책과제일 뿐입니다.

(3)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의 보완책

평준화제도는 입시준비에 매몰되어 기형화한 중·고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과외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현재 국민의 상당수가 국가의 공교육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 여파로 평준화의 문제점이 자꾸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교육과정과 학습내용이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굳이 평준화의 문제점을 든다면, '평균과 편차가 큰 학생들의 지도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이 부진하고 지진아 교육이 힘들며 문제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교육체제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103개)라는 실험도 있었지만 입시준비에 신경쓰다가 설립취지가 다소 퇴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업학교'(30교)나 '자율학교'(20교)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자립형 사립고'(3개교)의 경우, 우수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유용한 정책도구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학의 경영이 일단 안정제도에 올라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자립형사립고 제도가 요구하는 조건에 들어맞는 학교가 전국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사립중등학교의 재정조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대안학교'(11교)는 평범치 않은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할 만 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교육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평균과의 편차가 큰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학교를 소수 운영하면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이 다소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교육이 되면 결국 헛수고가 됩니다.

요컨대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직접관련자 이외에도 정부나 사회 전체가 특수한 형태의 학교들이 설립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성원하는 분위기,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결론 및 질의

결론적으로 고교평준화의 유지 속에 공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평준화를 폐지하면 입시지옥과 과외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해가 극심했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도 결국은 소수의 우수학생과 경제적 능력자들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국민의 70% 정도가 중·고교평준화를 찬성

한다는 사실이 평준화의 현실적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30년 동안 평준화 교육 속에서 성장한 40대 중반까지의 이 땅의 청년·중년층이 과연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문제는 신명나고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살리고 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의욕적으로 교육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대학입시정책, 그리고 대학을 자율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총리께 질의합니다.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위원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관련

○2003학년도부터 3개 의과대학과 4개 치과대학 등 총 7개 대학이 의·치의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과전문대학원의 도입이 본격화됨.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2003학년도부터 의·치의예과 학생을 모집하지 않으며,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학년도에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 학생을 모집하게 됨.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배경은

①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②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학교육의 발전과 의학의 사회적 역할 다양화를 촉진하며,

③WTO협약과 관련하여 의료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의료개방에 대비하고

④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단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의사양성교육 입문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사가 되기 위한 뚜렷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대학졸업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임.

○이 제도의 도입이 향후 의·치의학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함.

(질 의)

1.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수한 의과학자의 양성을 위해 장학제도 및 병역특례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관부처와의 협의는 완료되었는지?

2.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최근 대학가의 고시열풍과 유사하게 대학 재학생들이 의학교육 입문시험 [MEET :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열풍을 가져와 본연의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학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에서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복합학위과정(M.D.-Ph.D.)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의 대입특별전형제도 관련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는 대학교에서 모집요강에 “우리 대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미리 학업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반드시 원서접수 5일 전에 선정대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여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국립 창원대학교의 경우), 장애인의 교육환경 확보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이는 장애학생을 정도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여부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장애인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한 지 9년이 지나고 있으나 장애학생들이 이 제도에 의해 입학한 후에도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미비 및 일반학생들과의 부적응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현황을 밝혀 주기 바람.

○장애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도개선의 첫걸음조차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이므로 기초 조사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마련으로 교육권 확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와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해외 한글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문제점

○교사의 임대료에 따른 높은 임대료 문제

- 교재의 원활한 공급 필요성
 -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이후 공급이 더욱 악화됨.
- 한국역사·문학 등의 참고도서 절대부족
 - 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한국도서실' 설치의 필요성

2) 활성화 방안

- 재외공관이 해당국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도록 노력
- 해당국과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 교민들을 위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 의)

1.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한글학교의 독자적인 교사 보유 현황은? 교사확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검토된 바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2.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교재지원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없다면 교재공급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가?

대구산업정보대학 관련

- 현재 구재단측과 현재단측 간의 고소·고발 건이 걸려있고, 작년 감사과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2001.2.13자 양도양수무효판결확인 문제를 둘러싸고 구재단측이 관선이사파견과 학교법인 환원을 요구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신진수나 김성현 모두 학교법인에 대한 운영권한이 없으므로 새로운 운영권자 선임 여부는 오로지 교육인적자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음.
- 구재단측은 2001. 5월 감사결과(57건 141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 결정) 현 재단 운영자들의 학교 교비 유용 등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무런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실제로 어떤 신분상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자체 이행감사 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을 바람.
- 학교문제가 고소·고발, 감사에 따른 문제 지적과 조치 등이 되풀이되고 국회의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지 않는 것은

재단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구산업정보대학이 정상적으로 재단운영과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任鍾哲 위원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부총리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

- 부총리께서는 취임직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본 위원은 이를 기존의 정책들을 잘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서, 부총리께서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들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부총리 취임후 첫 업무보고 자리이므로 부총리의 교육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함.
- 부총리는 200년 4월에 출판된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는 책의 “무리하게 밀어붙인 교육개혁”이라는 칼럼을 통해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음.
- 예컨대,
 1.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교육정책에서는 촌지 근절 시책과 정년단축 정책에 교원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린 정책이다.
 2. 교권을 위축시킨 교육정책에서는 체벌금지 조치와 수요자 중심교육 정책(학운위 설치 등)은 교원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다.
 3. 갈등을 조장한 교육개혁에서는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이 교육체제 구성요소 간의 '양육강식' 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그리고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복수 교직단체들 간의 갈등은 교직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통해 교원들이 정치화될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교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교직사회는 심한 갈등을 겪었으며, 그 갈등으로 입은 상처가 아물려면 앞으로 수십 년은 걸릴 것이다.
 4. 현실성이 결여된 교육개혁에서는 열린교육, 수행평가 등은 교육현장의 제반사항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도입되어 학교교육에 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등과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음.

○또한 부총리는 동서(同書)에서, “최근의 교육개혁정책은 인간적 배려가 결여된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 교원들의 사기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일선 학교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최근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개혁은 교원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라고 얘기한 바 있음.

(질 의)

본 위원은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함.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주·주장들이 일시에 분출되면서 때로는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둘리기도 하였고, 급격한 개혁정책들이 미처 일선 교육현장에까지 뿌리내리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부총리께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또한 과거에 부총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자리에서 부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준화 정책에 대한 견해는?

○최근 재경부장관은 우리 교육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평준화 일변도로 이끌려 왔으며 평준화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음. 본 위원은 부총리도 역시 평준화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은 평준화정책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력 하향평준화의 주범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음.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995년 평준화가 학력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냈었으며,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도 1999년 평준화 고교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고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고교평준화정책이 1974년에 중학교육 정상화, 고교간 격차해소, 과학·실업교육 진흥, 지역간 교육균형 발전, 사교육비 경감, 대도시 인구집중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8년간 실시되어 오면서 그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

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그러나 최근의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강남학원 특구로의 학생이동 폭증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나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인한 학습지도상의 문제 발생 등을 볼 때, 평준화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 의)

본 위원은 기존의 특수목적고나 영재교육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평준화정책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교육의 문제는 평준화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류대학만을 선호하는 사회적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벌주의나 일등 독점주의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벌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Grand Plan은 무엇인가?

○본 위원은 각 부처(청)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및 조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소집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목적의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지난해에 총 7회 개최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에 첫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그러나 지난해 총 7차에 걸친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수는 총 17건에 불과하여 1회 평균 2.4건 정도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서 본 인적자원개발회의는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질의 1)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처 간에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결코 타할 수는 없겠으나, 본 위원은 이 과정에서 부처 간에 공통적인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또한 부처 간에 상충되는 시각차에 대한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 생각함.

이는 자칫 각 정부 부처에서 표출되는 이견들의 통합·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구축을 위해 확대개편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런 목적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 2)

본 위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의 낭비

및 중복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에 대하여 과감한 통·폐합과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현재 부처간 유사·중복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부총리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

<부처간 유사·중복 기능>

업 무	소관부처	담당부서	주 요 기 능
유아보육 및 교육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유아특수교육과	만 3세 -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후·교육(유치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보육시설)
청소년 교육, 수련 및 단체육성, 청소년 보호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중·고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및 성교육 등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3과)	청소년 육성·선도, 수련 및 단체활동 육성지원 등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단속 등
과학연구진흥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지원과	학술연구진흥, 고급 과학기술 인력양성(BK21 등), 대학연구소 지원 등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 (3과)	기초과학연구기관 육성 및 연구·학술 활동지원, 대학 우수연구집단 육성 등
도서관 업무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 교육정보화담당관실	학교 도서관 및 교육청 소속 공동도서관 정보화 추진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	도서관정책 총괄 및 국립도서관 관리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국 (3과)	- 학원, 실업계고, 전문대학 대상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정책 관장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정책 수립 조정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 자격지원과 인력자원개발과	- 비진학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관장 - 직업능력개발 훈련 정책수립조정 및 기술 자격제도 관리 -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관장
체육업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학교시설환경과	학교체육 육성, 체육특기자 관리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학교운동경기부 및 선수 육성지원 등
어문정책업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	국어·어문 교육정책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	국어·어문 정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2003년부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2+4 제도를 4+4제도로 전환하고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의대 대학원 입학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임.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41개 의대, 11개 치대 가운데 3개 의대, 5개 치대만 전문대학원 도입 결정하였음. 또한 지난 1월 17일에는 의대학장협의회에서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전문대학원 도입은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의대 대학원 진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폐쇄형 의사 양성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음. 또한 임상 의사의 과잉현상¹⁾을 고려할 때 의료계 인력이 단지 의사에 그치지 않고 연구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기초의학과 전문 의료인을 동시에 배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의대생의 34.9%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 30.6%는 전과를 생각하고 있다.”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대학에 들어와서 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거친 뒤 의대를 택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2+4제도하의 의대를 나온 사람과 4+4제도하의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의 학위차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6년제 의대를 나온 학생은 학사학위(B.M)를 받고 전문대학원을 나온 학생은 의무석사학위(M.D)를 받게 됨.

(질의 1)

선진국 대다수가 의학교육에 있어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 독일, 프랑스 등은 2+4년의 6년제이지만 학사·석사 통합과정으로 인정되어 석사와 준하는 학위를 받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는 2+4년제, 3+4년제, 학사+4년제 등이 운영²⁾되고 있지만 어느 학제로 졸업했든 졸업생은 모두 동일한 석사 학위(M.D)를 받고 있음.

이에 본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게 되더라도 규정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봐야

1) 매년 3000여명의 의사 배출, 98%가 전문의 됨. 1998년 말 기준 1200명 이상의 의사가 미취업 상태
 2) 1999년 미국, 캐나다 141개 의과대학 중 2+4 8개교, 3+4 108개교, 학사+4년제 25개교(17.7%)

겠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하며, 전문대학원체제 운영과정에서 현재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바람.

(질의 2)

또한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대입시과열이 대학으로 고스란히 옮겨가 이과계열의 기초학문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임. 이는 상당부분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되며 이에 본 위원회는 4년제 학사과정에서 의학과 관련 선수 이수과목 규정을 강화하거나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에 학부성적 반영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함께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무엇이며, 기초학문교육의 파행을 초래하지 않고서도 전문대학원 도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만한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학벌문화 타파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에 추진하기로 공언한 <학벌문화 타파 추진계획>은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함.
- 일각에서는 <학벌문화 타파 추진계획>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작년 3월에 처음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이후 1여년의 기간동안 학벌문화 타파에 대한 연구와 관계기관의 회의를 수차례 거치면서 나름대로 신중한 준비과정³⁾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학벌문화는 결국 입시위주, 암기식 교육을 부채질하고 인성교육을 소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있음.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저마다의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학 출신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한 사람의 능력을 규정하는 현실은 시대착오적이며 따라서 학벌문화를 타파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3) <학벌문화 타파 추진계획 일지> 2001년 4월(한완상 교육부총리 지시로 전문기관에 학벌타파 방안에 대한 연구의뢰)→5월 18일(민주당 당정회의에서 한완상 교육부총리 ‘공교육활성화대책’으로 학벌문화 타파 주장)→8월, 10월(전경련 등 재계 인사담당자와 한국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가협의회에서 학벌타파 방안 공동연구)→10월 3일(‘학벌문화 타파 정책 추진’ 의지 천명)→11월 27일(구체적인 추진정책 완성)

인 정책을 살펴보면 ‘학벌문화 타파 전담기구 설치’, ‘학벌문화 타파 중·고교 지정’, ‘국민의 학벌문화 교육관 개선’, ‘대입제도 개선’,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등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자격증과 경력 중심의 다양한 인증제도 마련’,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기업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다른 부처의 협조나 경제단체장들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 1)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벌문화 타파 추진계획>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학벌 제일주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시행 주무부처나 총괄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 이 정책은 전임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임 부총리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람.

(질의 2)

사실 학벌문화는 인적자원 전체를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지만 관련부처의 이해·협조나 국민의 합의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다고 생각함.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의 ‘학벌문화 타파 논의’에 대해 다른 장관들이 반발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학벌문화 타파 추진계획>이 큰 결점을 지닌 정책인양 비추어진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합의를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하고 추진한데서 오는 문제였다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정책의 의도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고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부총리는 <학벌문화 타파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해당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또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답변 바람.

(청년층 실업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관련)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1년 3/4분기 중 20대 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3.3%)의 2배 수준이고, OECD에서 청소년층으로 구분하는 15-24세 실업률도 9.7%로 전체 실업률의 약 3배나 되어 OECD회원국 평균

(1.8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임. 이러한 청년 실업의 문제는 특히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들에게서 심각한 실정인데, 대학진학률이 95년 51.4%에서 2000년 68%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과다 배출되었으나, 노동수요는 경기침체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표1>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2000년)

	OECD 평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2001, 3/4)
전체 (A)	6.4	4.0	5.6	5.0	8.1	3.3
청소년 (B)	11.8	9.3	11.8	9.2	7.7	9.7
B/A	1.84	2.33	2.11	1.84	0.95	2.9

OECD 2001 Employment Outlook

○2001년 12월 현재 12만 명의 대졸 실업자, 28만 명의 대학4학년(졸업예정자) 등 총 40만 명의 신규인력이 6만 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으로 취업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대학생들은 필수과목 수강철회, 대학원 진학, 유학 및 어학연수, 학사편입 및 군입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졸업을 연기하면서 이들 모두가 유사실업상태임.

<표2>

연도별 대학 진학률

1970	1985	1995	1999	2000
26.9	36.4	51.4	66.6	68.0

○특히 산업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훈련으로 기업의 채용형태도 신입사원보다 경력직 우선의 수시채용으로 변화하여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을 기대하지만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은 기업의 니즈와 괴리된 부실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매우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대학경쟁력은 29개 OECD 회원국과 18개 신흥공업국 등 47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43위로 평가(IMD, 2001)됨.

○고학력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자신이 보유한 지식 및 전공, 학력 등과 일자리가 맞지 않아도 일단 취업하고 보는 이른바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음.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3 정도

가 첫 일자리를 하향 취업하거나 직무 불일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특히 적체적소에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인력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저하되면서 사회전체로 최적 생산이 어렵고 비용증대만 초래하고 있는 것임.

(질 의)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차제에 대학교육 전반에 걸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즉 대학졸업후 실무영역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기초학문 분야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용학문 위주의 학과 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5년까지 인적자원 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관련)

교육투자의 효율성 증대방안은?

○OECD의 2000년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27개 회원국과 세계교육지표사업(WEI : World Education Indicators)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한 32개국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한국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영역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개별적인 학생 수준은 결코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LG경제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산업전반의 비용(가격) 상승에 비해 교육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교육부문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표1>

학교교육의 상대가격 변화

	공교육비 증가율(%)	GDP Deflator(%)	상대가격의 변화
1970년대	20.0	21.2	-1.2
1980년대	17.0	7.5	9.5
1990년대	13.9	4.8	9.1

* GDP Deflator : 전반적인 비용(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물가지수(경상시장가격 GDP/불변시장가격 GDP×10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한 공교육을 사교육이 충당하면서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사교육의 확대는 교육 기회가 균등해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사교육 투자를 줄이고 절대적인 액수면에서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공교육의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높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질 의)

사교육비의 문제는 매년 논의되었던 내용이고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의 비중을 생각해 볼 때, 특히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교육투자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중등교육의 정책방향을 현재 사교육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기능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교육개혁에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방학동안 전국적으로 각 대학교의 교육대학원내에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상담, 생활지도상담, 진로선택에 관한 상담활동을 효율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그리고 이렇게 양성된 전문상담 교사들이 각급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의 지도와 각종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라 생각함.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양성된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보다는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상담자격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일선 학교 교사들의 승진점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본 위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상담교사들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상담교사는 승진말고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보면 교내 상담교사 배치의 필요에 의해

학교장이 배치 운용하며, 일반적으로 전공교과를 가르치면서 학생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활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바임.

(질 의)

이제는 우리나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일선 학교에 형식적이고, 실효성도 없고, 학생들이 외면한 상담실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담실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승진과 관계없이 전문적으로 학생 상담만을 위한 교사양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실화 방안은?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기간 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 본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거론하였던 전산보조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총 3637명의 전산보조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하여 치하하는 바임. 특히 전산보조인력 임금의 현실화와 채용기간의 연장 등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함.

(질 의)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던 - 정보화 소외학생에 대한 PC보급, 교사 연수비용의 국가지원, 노후 PC 업그레이드 및 교체추진, 과목별 30%의 ICT 활용추진 -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특히 교사 정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 위원실로 서면 보고해 주기 바람.

미발령자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와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90년 10월 8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 교육청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임용대기자들(당시 9930명)이 당시 현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현재 미발추를 구성함(현재까지 약 4500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추산)

○물론 이 문제는 현재에 의한 결정으로 당시 교육당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 결정으로 인해 당시의 임용대기자들이 피해를 입게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든 교육당국이 책임성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

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질 의)

이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미발추 문제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함. 만일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 미처 업무과약을 못하였다면 실무담당자의 답변을 바람.

유아미술학원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올해부터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세아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이 대폭확대된 것은 복지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유아교육 실태를 보면 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유아의 수는 유아교육 총 대상 아동 약 210만 명(만 3세~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26%정도인 54만여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기타 보육시설이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아동수가 훨씬 더 많은 실정인 것은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임.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별 취원현황(2001년)>

기관명	기관수	총취원아동	만5세아동수
유치원	8,828개	543,060명	약 306,000명
보육시설 (어린이집등)	19,533개	702,860명	약 206,000명
유아미술학원	8,508개	562,382명	약 184,000명

○또한 현실적으로 유아미술학원이 탁아기능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20-30대 젊은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점이 있고, 지역사정상 유치원보다 유아미술학원이 더 선호되는 곳이 적지 않음도 무시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본 위원은 교육당국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통하여 차제에 유아미술학원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金貞淑** 위원

고교평준화

본 위원은 지역마다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인 수도권에서 타의에 의해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준화'는 불만과 불복중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필연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명문고가

얼마전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선지방 배정’과 ‘근거리 배정’이라는 배정방식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및 지역사회가 각기 다른 방안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이 평준화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타당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선 복수지원 후 추첨’과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2단계로 고교를 배정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준화 방안을 내놓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정상화, 입시과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1년 8월 17일 교육인적자원 분야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선 각 분야에서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교육평준화가 바람직스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시대엔 평준화 교육이 필요했는지 몰라도 지식기반사회에선 그것만으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평준화 시안에 대해 학교서열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사실상의 비평준화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평준화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준화가 궁극적으로는 하향평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고교 평준화의 첫 번째 명분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망국적 과외병을 없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세대가 흐른 지금 입시에 따른 부담은 여전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국가 공교육 예산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학(修學)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한 학교, 한 반에 뒤섞어 가르치다보니 결국 얻은 것은 학교에서는 잠자고 공부하는 학원가서 하는 ‘교실붕괴’ 뿐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 목표를 보통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을 불어 넣어주는 데에도 있지만 나라를 이끌어갈 우수인재의 발굴·육성하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평준화제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혜를 총동원해서 개선의 방향과 방법론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장하는 인적자원개발은 물론 21세기 선진국과 창조는 머나먼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마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5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2002학년도 새입시 도입 3년만에 또 대입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교실붕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큼니다. 지금 학교 형편으로는 새 대입 제도를 소화해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2005년 대입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7차 교육과정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문제는 심각합니다.

더욱이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외 나머지 과목을 소홀히하여 면학 분위기가 저해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원과 비슷하게 수업을 변칙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기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나 교과과정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며, 학교교육이 대학별 반영 영역에 맞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선택과목제 도입으로 동반되는 현상으로 고교 1학년때부터 아예 인문계 학과 지원자는 수리와 과학탐구를, 자연계 학과 지원자는 사회탐구나 언어를 아예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고교 1학년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과에 이들 과목이 모두 포함돼 있고 대신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는 고교에서 수업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 되는 공부마저 외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셋째, 사교육은 지금보다 더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영역 선택이 확대됐지만 대학들이 지정하는 선택과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여러 대학을 목표로 준비해야 하므로 입시부담은 여전할 것이고 또한 선택과목에 비중을 뒤 출제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지고 학원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비해 ‘맞춤식 교육’이 가능한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이며,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만 강조할 경우 학교가 입시 준비반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교 1학년 말부터 진로를 정해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에게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만일을 대비해 대부분의 과목을 두루 공부할 경우에는 수험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넷째, 새 수능제도가 실업고 교육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번 직업탐구를 시험과목으로 추가한 것이 실업고 진학생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업고 교육은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학년도 수능에서 출제해야 하는 문제지는 모두 48과목입니다. 현행 22개 과목에서도 난이도 조절에 잇따라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수능 출제기관으로선 부담이 더 커진 것입니다. 즉 수험생 선택과목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선택과목별로 출제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시험관리에도 엄청난 부담이 뒤따르고 난이도까지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학생에 따라 응시 영역이 1~5개로 다르고, 수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의 선택과목 수·종류도 차이가 커져 응시시간 조절, 교사장 배치 등 시험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먼저 시험을 끝낸 수험생과 시험이 남은 수험생간, 같은 영역 내에서도 선택과목수가 다른 수험생간 응시시간 조절과 출입문제까지 신경써야 하며 교사장배치도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학생수와 교사수가 많은 도시지역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 운영 역량이 달라지므로 학생들의 유·불리가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수목적고나 사립고 등 학교 형태별 재정 상황이나 교육시설 환경, 교사의 자질 등에 따라

선택과목 운영의 질적 수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역시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총리께서는 7차 교육과정의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2005학년도 대입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선택과목제 도입에 따라 과목 편식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입시학원화할 수 있는 학교현장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도 사교육 문제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공교육 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2005학년도 대입제도는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 근절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업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은 오히려 실업교육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실업고 학생수가 늘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그 수요창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직업탐구 영역 신설이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 관련

지난 2002년 1월 16일 있었던 시·도교육감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히 자금을 집행하여 경기 부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월 2회(매월 15일, 말일) 개최, 집행부진을 질책하여 왔으며, 지난 2002년 1월 10일에는 경제수석 주관 각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주요사업 예산 상반기 집행, 특히 1/4분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국고예산 중 이월·불용액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시 삭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도 집행점검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주요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을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집행점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위 시·도교육감 회의자료를 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어떤 교육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본 위원이 입이 닳도록

말해 온 것이 바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것이었고,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전시행정, 선심성 행정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 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우리의 교육을 불모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과연 이러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고, 동 자료에서처럼 과연 교육예산의 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 위원

교원성과금 지급 보류와 관련

- 장관, 지난 2월 8일 전교조 이수호 원장과 교원성과금 문제와 관련하여 면담한 적 있습니까?
- 교원성과금은 시행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또한 장관께서 지적한 대로 ‘권력의 오만성’에서 시작된 정책이라 봅니다.
- 본 위원은 2001년도 국정감사시에도 교원성과금에 대해서 성과금을 반납하는 교원들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성과금 지급계획에 대한 계획을 전임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전임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답변에서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공무원관계에 있어 공권의 일종으로써 양도 또는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성과상여금을 반납할 수 없고, 돌려받을 수도 없다 할 것임” 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적용할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수당형태의 지급방안도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임 한 장관은 1월 23일 모 일간지와와의 대담에서 교원성과상여금 문제를 어려움은 많지만 묘안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전임 장관은 교원성과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고, 장관이 바뀐지 불과 2주일 정도 지나, 올해의 교원성과금을 지급보류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주 부총리 역시 ‘권력의 오만성’에 의해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

부의 내부방침은 전부터 지급보류를 방침으로 잠정 결정했음에도 한완상 전 장관이 국정감사시에는 본 위원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교원성과금 보류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현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은 오락가락 정책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어떤 식으로든 지급을 해야할텐데 장관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지급보류 결정을 한 것인지, 혹여 나는 소나기만 피해갈테니 이 문제는 차기정권에서 해결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사 건설비리 척결에 대한 장관의 의지 촉구

- 지난 1월 울산교육청 관내 일선학교에서 학교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착복한 교육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장관께서는 교육현장에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공사와 관련한 건설비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지난해 본 위원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은 거의 학교공사에 대한 뇌물이었습니다.
- 정부가 2004년까지 학교 신·증설을 위한 소요예산만도 12조 4700억 원에 이릅니다. 공사 관계자들의 증언처럼 10%에서 30%를 뇌물로 교육공무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이란 교육재정이 부패한 교육공무원들 주머니속으로 사라집니다.
- 장관께서는 학교공사 관련 건설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고교 재배정 관련

-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시고 오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취임후 채 20여 일이 되지 않아 업무과약도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올해 경기도 내 4개 평준화지역에서 도저히 일어나서 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고입 신입생 전체 3만 7300여 명 중 20.7%인 77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시 배정받을 것이라 합니다.

이 원인이 프로그램 오류로 학군내 근거리 배정원칙 일부를 위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일부 학생들을 특정 고교로 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학부모들의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았다가 선호도가 낮은 학교로 재배치될 2167명의 학생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 신입생 배정프로그램의 수주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낙찰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이번 사고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의 수주로 인해 부실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교육 공무원의 불성실과 나태가 빚어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백 회의 모의 실험을 했다는데, 가장 단순한 학생배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상급 감독기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통해 재발장지에 대한 각오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교양교육 수준 개선요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165개 대학의 교양교육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 최우수 판정을 받은 학교는 5개 대학에 불과하고, 개선요망인 대학인 4개, 보고서 미제출 대학이 5개, 판정유보가 12개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들의 교양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전공교육 분야에 치중하고 교수확보율이 높지 않아 교양교육을 시간 강사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양강좌 중 전임교수 담당비율은 평균 38.99%에 불과했으며, 교양강좌 중 박사이상인 담당하는 비율은 51.8%에 불과했습니다.

○부총리, 대학의 전임강사 비율을 높이고 교양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답변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李相周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金花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경기도교육청 학생 전면 재배정과 관련하여

- 1) 특별감사를 통한 관련자 문책 대책
- 2) 학생 배정과 관련된 일부 시·도 학부모의 불만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지역 신입생 고등학교 학생 배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여 빚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업무관련자들의 부주의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업체선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생 배정 업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등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 확인한 결과 나머지 시·도의 학생 배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신설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자립형 사립고를 수도권이 아닌 전국 군단위에 설치하는 방안

2) 농어촌소재 고교 등에 자율학교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및 학교재정이 열악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 조건 중 하나인 재단전입금 부담에 있어 농어촌 고교의 대부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나,

- 수도권 등 일부지역 학교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있으므로, 시·도교육감이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부에 지정을 건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 이는 수도권 지역에 국한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농어촌 소재 고교의 열악한 실정을 고려하여
 - 농어촌 소재 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농어촌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농어촌 지역의 자율학교 연구점수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우수한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병역특례제를 통한 우수교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론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있으나,
- 관계부처에서는 병역자원 감소추세와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으며,
-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국민개병제 원칙에 어긋나고 교원의 경우 오히려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 교육목적상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병역특례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및 학교금연운동과 관련,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체계화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학교보건교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생물·도덕·가정 등의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 학교실정에 따라 특강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 성교육, 흡연 및 음주 등 약물남용 교육 등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 학생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

지도와 금연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열을 선택하거나 대학 입학 때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최근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기피 현상은
 - 첫째, 수학·과학 등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요즘 청소년들의 경향과 함께
 - 둘째, 우리사회에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전문직업인 보다 낮아 학생들이 졸업후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여겨 이 분야로의 진출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열 수능 응시자수 : 98년 37만 5023명
→ 02년 19만 8963명

- 특히 우수 학생 등이 이공계보다는 의과대학 등을 선호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공계열 대학 입학자 수 : 98년 14만 2250명
→ 02년 14만 5215명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오는 3월 2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하여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장·단기 정책방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이 대책에는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이공계 대학교육 활성화,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교육분야의 대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의 직업여건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질 의)

기술계학원에 대한 지원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계학원 지원·육성정책은 재고하라는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기술계학원은 민간부문의 대표적 직업기술교육 기관으로서 산업기술인력 양성·공급, 성인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 우리 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마련한 기술계학원 육성방안은 세제상의 혜택 부여, 수강료 및 기자재 구입자금 용자 지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술계학원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지원하는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학 지원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마무리하는 교육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소신과 의지, 비전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국민의 정부」에서 지난 4년간 추진되어온 교육 정책은 5.31 교육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교육정책들을 성과있게 마무리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뿌리내려 더욱 큰 열매를 맺게 하는데 더 큰 힘을 기울일 것이며
 - 또한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정책을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국립대학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사립대학은 운영수입의 7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법인전입금이나 국고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 ※2000년 사립대학 재정운용 현황
 - 등록금 의존율 : 69.4%, 법인전입금 : 7.9%
 - 국고지원금 : 4.4%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75%를 점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 국고지원액의 연차적인 확충과 각종 세제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 동창회 및 기업 등으로 부터 기부금을 적극 유치하며,
 - 사학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 예·결산의 공개 등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사학 재정의 건실화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 사학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 의)
대학교원 확충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대학교원의 확충이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이에 우리 부는 올해와 내년 국립대학 교원을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증원하기로 지난해 이미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02년도 1000명분은 현재 대학에 배정하여 교원채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원 확보율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여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전임교원 증원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교원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방안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질 의)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기여입학제에 대한 우리 부 입장은
 - 기여입학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본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 사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등으로 대학간 격차 심화 및 서열화를 가중시키는 등 현 단계에서는 장점보다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여입학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玄勝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요건인 재단부담 20% 완화에 대한 의향과 서울시교육감이 계속 반 대할 경우 대책
 2) 30개교로 확대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 니다.

(답 변)

- 당초 자립형 사립고 지정요건은 정책연구 등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 고 시범운영을 원하는 일부 사립학교 등에서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학계·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재단전입금 문제 등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위원님 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徳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열을 선택하거나 대학 입학 때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최근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기피 현상은
 - 첫째, 수학·과학 등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요즘 청소년들의 경향과 함께
 - 둘째, 우리사회에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전문직업인 보다 낮아 학생들이 졸업후 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여겨 이 분야로의 진출 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자연계열 수능 응시자수 : 98년 37만 5023명
 → 02년 19만 8963명
- 특히 우수 학생 등이 이공계보다는 의과대학 등 을 선호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 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공계열 대학 입학자 수 : 98년 14만 2250명
 → 02년 14만 5215명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가경쟁력 의 원천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오는 3월 2일 인적자 원개발회의에 상정하여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장

· 단기 정책방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 이 대책에는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이공계 대학교육 활성화,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인센 티브 부여 등 교육분야의 대책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자의 직업여건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등 다 각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질 의)

장기적인 인력정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 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인 인력수급대책이 미비하여 인력 관련정 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 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금년 중에 국가차원의 인 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기관, 교육기 관 및 산업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 구체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3월 중에 범정 부 차원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시안을 마련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 렴한 후, 연내에 인력수급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자 합니다.

(金貞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 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 니다.

(답 변)

- 「국민의 정부」에서 지난 4년간 추진되어온 교육 정책은 지난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당 사자들간의 갈등과 정책수단의 현장적합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교육개혁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시 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뿌리내려 더욱 큰 열매를 맺 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공사지연으로 타 학교를 이용한 개교사례(6월

이나 12월 완성학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01년부터 04년까지 1202개교를 신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개교되는 학교는 190개교입니다.
- 이중 15개교는 공사가 지연되어 타 학교를 이용하여 올 3월에 개교 할 예정이고,
 - 이들 학교는 개교 지연 사례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조기에 준공을 완료하여 개교도 록 조치하고
 - 일부 학부모들이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 천 덕산고는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들 학교에는 우수교사 배치, 첨단 교육 기자재 지원, 통학버스 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신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기간제교사 해결방안과 탄력성 있는 교원수 급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3년전 정년단축 후 공무원 연금재원에 대한 불안 심리로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하여 초등교원 충원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간제교사 활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 ※ 기간제 교사는 초등교사자격증을 지니고 상당 기간 초등교육에 봉직한 경륜이 있는 분들이 다수이므로 전문성 측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 금년의 기간제 교사는 2777명으로 작년의 4517 명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67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2002학년도에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에 대하여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대에 편입학 토록 하였고, 이들 편입생들이(2500명) 졸업하면 (2004학년도) 기간제교사를 대체해 나갈 것이며,
 -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 수가 대폭 감소(03년 6,722→04년 2,594)될 예정이므로 2004년 이후 에는 교원수급이 점차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 으로 전망됩니다.
- 이와 병행하여 초등교원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충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 탄력성있는 교원수급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초 등교원의 양성 대(對) 임용인원을 1.2 : 1정도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 의)

제7차 교육과정이 제 제도에 오르지 못한 상 황에서 2005학년도 대입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 니다.

(답 변)

- 정부는 지난 95.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97.12월 제7차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 후 학교급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고1학 년으로 확대되고 2004년에 고3학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05학년도 이후의 수능시험 개편은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98.10.19)에서도 2002학년도까지 발표키로 사전 예고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말 발표한 「개편안」은 고교 교 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여건고려와 교사, 교육 청, 대학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 습니다.
- 앞으로 우리 부는 교육청, 고교와 함께 제7차 교 육과정이 현장에 착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자 체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지도하 고, 학생들도 미리 진로선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田溶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장관의 평소 견해(학 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와는 모순이 된다 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평생을 우리 교육현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은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 져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따라서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또한 우리 교육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5.31 교육개혁 방안의 기본철학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다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교육개혁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생긴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 의)

교육정책 입안 및 조정기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집행기능은 규제완화 및 권한 위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에서는 정책 및 조정기능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집행과 정책기능을 혼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2001년도에 교육부총리 부서로 승격하면서 현 교육기능을 교육개혁 정책 및 기획·평가에 역량을 집중토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집행기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 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율화와 교육규제완화를 통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또는 권한위임이 필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학습관 등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난 1972년도에 설립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민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세계적 수준의 원격교육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 지난해에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평생대학원을 개설한 바 있으며, 위성 TV방송을 이용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 쌍방향 교육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학생들의 출석 수업, 만남의 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지역대학과 지역학습관의 단계적 확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任鍾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KDI연구결과 재정경제부의 일방적인 언론보도에 관하여 부처간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Vision2011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적 의견이 아닙니다.
- Vision2011은 전체적으로 향후 10년간을 내다본 장기 전망으로 당장의 정책변경 제안이 아니지만, 우리 부는 민간의 교육정책 관련 제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 부는 지난 12월 관계부처간 합의를 통해 공표된 정부 공식 계획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토대로 교육부문의 자율화와 다양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현 정부의 교원 정년단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교원정년 단축은 당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정년을 급격하게 일시에 단축하고, 또 정년단축 당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소문으로 불이익을 우려한 명예퇴직자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이 빚어진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개혁의 기초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 즉,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방향은 맞지만 일부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에 기여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토록 하여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학교운영 과정 공개,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교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 학교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사가 짧고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획일적인 교육이라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고등학교 평준화는 과열 고교 입시로 인한 사회적·교육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74학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 그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소위 ‘중 3병’이라고 하는 과열 고교 입시경쟁 완화 등의 성과가 있으나
 - 학급내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 곤란, 학력저하에 대한 논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기회 및 사학의 자율성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고교평준화가 국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형평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우리 부에서는 고교 제도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특수목적고(103개교), 특성화고(41개교) 및 자율학교(20개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 금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자립형 사립고(5개교)와 내년의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평준화 보완 방안의 하나입니다.
- 앞으로도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 우수아를 위한 영재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 내년도에 시범운영 예정인 자립형 사립고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시범운영학교를 추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 특성화고교(41교), 예·체능고교(35교) 및 전국 농어촌 지역 고교(666교) 등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며,
 - 현행 제도에 의한 특수목적고교, 직업학교, 대안학교의 설립·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등학교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 의)

자립형 사립고를 30개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부총리의 입장인지, 특히 서울시교육감이 주장한 서울의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에 국한 시행한다는 것은 입시과열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이 당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부에 건의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3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과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 입시위주 교육 등의 왜곡 방지를 위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 기본적 운영은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만5세아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미술계 학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유아미술학원은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 근본적으로 「유치원」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만5세아 무상교육이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화의 전단계로서 추진되므로
 - 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유아미술학원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되,
 - 무상교육기관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金敬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KDI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평준화문제와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또한 정부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평준화문제는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영재교육 확대 등 고등학교의 다양화·자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기여입학제도는 치열한 대입경쟁하에서 국민계층간 위화감 조성, 교육기회균등 관련 위헌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의 초래가 예상되므로 도입 검토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교육인적자원정책과 관련한 각 부처의 다양한 견해는 장관회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그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고급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 확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2000년부터 여성교수 비율 및 학과장급 이상 보직 여성교수 현황을 대학재정지원 평가에 반영하고, 국·공립대의 주요 행정보직 및 위원회에 여성교수 참여 제고를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 4월 현재 4년제 일반대학의 여성교수는 전체의 14.1%에 불과하며 국·공립대학은 8.8%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 한편 2001년 4년제 일반대학 입학생 중 45%, 졸업생 중 47%를 여학생이 차지할 정도로 대학교육기회의 확대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제 대학이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여학생들을 우수한 여성인력으로 길러내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우선적으로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련 공청회 개최(2002. 2), 대학 등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여성교수 비율 제고 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朴昌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재별그룹인 현대와 특별한 인연을 지속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저는 거의 평생동안 교육학자로서, 대학교수로서, 그리고 대학행정가로서 일해왔으며
-특히 고인이 되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창립 주도해 온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일을 30년간 보아왔습니다.
- 이를 연유로 88년부터 8년동안 현대에서 유지·경영하는(법인명 :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 정몽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자연 현대그룹과 관련이 있는 학교 등에 이사 등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모든직을 사임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아울러 교육부총리라는 자리 앞에 놓인 교육의 과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도 깊이 느끼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적 친분이나 명예보다는 「교육입국」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장관의 평소 견해(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와는 모순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평생을 우리 교육현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은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따라서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또한 우리 교육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5.31 교육개혁방안의 기본철학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교육개혁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생긴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 의)

- 1) 현재 3월 개학시에 배정받은 학교에서 수업을 못받고 원거리 더부살이 수업을 받아야하는 학생수는?
- 2) 이들에게 수업료 면제, 교통비 지원 등의 대

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도 개교학교 중 공사가 지연되어 타 학교를 이용하여 개교하는 학교는 15교이며 학생수는 6125명입니다.
- 타 학교를 이용하여 개교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생수용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수교사 배치, 첨단교육기자재 지원, 통학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 배정받은 학교가 원거리인 부천 덕산고 등 4개교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학교는 등·하교시 기존 시내버스 배차를 늘리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거리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는 해당지역 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직접적인 수업료 면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통학버스 지원 등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토록 하여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학교운영 과정 공개,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교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 학교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사가 짧고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KDI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평준화문제와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견해는?
또한 정부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평준화문제는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영재교육 확대 등 고등학교의 다양화·자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기여입학제도는 치열한 대입경쟁하에서 국민계층간 위화감 조성, 교육기회균등 관련 위헌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의 초래가 예상되므로 도입 검토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교육인적자원정책과 관련한 각 부처의 다양한 견해는 장관회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그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薛勳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국민의 정부 4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리를 하여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평가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우리 부는 95.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후 지금까지 추진된 교육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평가를 통해 기존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재점검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 교육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국립사범대학교 졸업자 중 미발령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헌법재판소는 90.10.8 국립사대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국립사대출신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90.12.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91년부터 3년간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대출신자로 선발·임용토록 경과규정을 둔바 있으며,

- 95.5.25 헌법재판소는 미입용자들이 청구한 「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법적기대권등에대한헌법소원」에 대하여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근거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기득권보호가 끝난 지금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재결정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 아울러 90년 2월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들만 구제할 경우 87~90년까지 당시 국립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도 이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특별임용을 주장할 우려가 있고, 현재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험준비생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현재 시·도별로 충원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이 많아 즉시 채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채용할 경우 사실상 과원교사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 특별법에 의한 교원임용이 계속될 경우 우수한 교원확보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원임용체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의)

만5세아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미술계 학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유아미술학원은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 근본적으로 「유치원」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만5세아 무상교육이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화의 전단계로서 추진되므로
 - 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유아미술학원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되,
 - 무상교육기관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분〉

(李在禎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수한 의과학자의 양성을 위해 장학제도 및 병역특례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유관부처와의 협의는 완료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지난해 12월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개발비, 의학교육입문시험 개발비, 실험·실습장비 확충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기초의과학 분야와 BT분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M.D.-Ph.D.과정에 입학하는 소수 정예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이들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전문연구원 편입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시행령이 지난해말 개정되었습니다.
- 금년에 전문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소요 예산을 예산부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 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대학 재학생들의 의학교육입문시험 열풍을 가져와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입문시험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과목, 학사교육과정 동안의 평점 평균(GPA), 사회봉사실적, 외국어 능력 등 대학 자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입학자격 심사제도로 인해 학사과정에서 충실히 공부하지 않으면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교육의 황폐화보다는 오히려 공부하는 대학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유념하여 의학전

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대학교육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들이 학부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에서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복합학위과정(M.D.-Ph.D.)이 필요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M.D.-Ph.D. 프로그램이란 생명·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의학교육 기본과정과 학술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학위과정입니다.
- 두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 석사학위(M.D.)와 학술 박사학위(Ph.D.)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운영 제도입니다.
- 21세기의 대표적 고부가가치 성장지식산업인 생명공학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의과학자의 양성이 절실하나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인력은 미국의 5%, 일본의 10%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기초의과학자 양성은 물론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M.D.-Ph.D. 과정의 개설이 시급히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부여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행 법령상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대학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정원의 학생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46교 1097명
- 특수교육대상자의 대학진학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교육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형을 확대하도록 개별대학에 권장하고,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원기회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한글학교의 독자적인 교사(校舍) 보유 현황은? 교사확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검토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해외한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교재지원을 제외한 재정적 지원 및 관리업무는 이미 2000년도에 우리 부에서 외교통상부 산하 법인인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되어, 현재 96개국에 1687개교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지에서는 우리 부에 한글학교 교사연수 지원 등 교육적인 측면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인 재외동포재단의 답변입니다.>
- 한글학교는 거주국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정규 한글학교로 특성상 독자적인 교사(校舍) 보유 한글학교수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어 있지 않고 매우 적은 것으로만 알고 있고,
- 교사 건립비 지원은 현재 한글학교의 설립과 폐지가 임의적이라는 특성과 예산사정상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학교 교사 건립을 위하여 거주국 동포사회의 자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거나 관할 공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글학교 교사 건립비 지원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임>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2001. 9월 현재)

구 분 국가별	재외동포현황			재외동포 교육기관							
	재 외 동 포	일 시 체류자	합 계	교육관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한글 학교	
				기관수	파견자수	기관수	파견자수	기관수	파견자수		
미 국	1,961,244	161,923	2,123,167	2	2	6	6	1	-	842	
중 국	1,799,196	88,362	1,887,558	1	1	-	-	5	10	17	
일 본	566,655	73,579	640,234	3	5	14	22	4	22	49	
러 시 아	152,230	4,420	156,650	1	1	4	5	1	1	129	
독 일	14,995	15,497	30,492	1	1	1	1	-	-	37	
영 국	2,515	12,485	15,000	-	-	1	1	-	-	15	
프 랑 스	5,895	4,590	10,485	2	2	1	1	-	-	5	
우즈베키스탄	230,000	800	230,800	-	-	1	2	-	-	106	
캐 나 다	127,185	13,711	140,896	-	-	1	1	-	-	78	
카자흐스탄	99,066	634	99,700	-	-	1	2	-	-	159	
키르기스스탄	19,673	327	20,000	-	-	1	1	-	-	33	
브 라 질	47,853	244	48,097	-	-	1	1	1	1	20	
호 주	31,530	15,697	47,227	-	-	1	1	-	-	42	
아르헨티나	24,710	360	25,070	-	-	1	1	1	1	5	
인도네시아	6,071	12,808	18,879	-	-	-	-	1	7	2	
파 라 과 이	6,277	87	6,190	-	-	1	1	1	2	6	
싱 가 폴	600	4,360	4,960	-	-	-	-	1	2	1	
대 만	653	2,292	2,945	-	-	-	-	2	2	2	
사우디아라비아	10	1,325	1,335	-	-	-	-	3	2	1	
베 트 남	-	6,226	6,226	-	-	-	-	1	2	2	
이 집 트	-	679	670	-	-	-	-	1	1	1	
이 란	37	682	719	-	-	-	-	1	1	-	
기 타	66,782	69,727	136,509	-	-	-	-	-	-	165	
계	5,162,994	490,815	5,653,809	10기관 (6개국)	12명	35개원 (14개국)	46명	24개교 (14개국)	54명	1,687교 (96개국)	

(질 의)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교재지원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없다면 교재 공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교재 수요조사를, 매년 학기에 따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전량 공급

하고 있습니다.

○ 교재 공급에 있어 지도서의 부족을 느끼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에 전량을 공급하기에는 추가예산(약 1억 7000만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전량공급이 가능하도록 향후 예산확보 및 지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다만 현지의 학생수 변화, 수요 조사의 차질 등

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져서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공관에서 교재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지역에 공급해야 하나, 각국에 탁송하는 과정에서 선편의 사정, 이동 거리, 입국절차, 해당국의 국내 사정 등의 원인에 따라 교재공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붙임>

2001년 케이토포 교육개발 미 고그 이어 시저

1. 교재개발

가. 내용 : 재외동포용 한국어 기초교육을 위한 교재

나. 교재의 종류 :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회화 1」, 「한국어 회화 2」

2. 기존교재 수정·보완

가. 추진 내용 : 「한국의 역사(영어권)」 내용 수정·보완

○한국의 역사 우리말 내용 수정·보완

○영어 본문 수정·보완

3. 교과서 및 교재 공급[총 82개국 115개 공관, 41만 4939권(점)]

가. 한국 교과서(1, 2종 도서) 공급 : 재외한국인 자녀 교육용 교과서 31만 1954권(78개국, 107개 공관)

나. 교재 공급 : 재외동포용 교재(36개국 55개 공관) 총 9만 6359권

- 한국어 : 8만 2554권

- 한국어 회화 : 6510권

- 한국의 역사 : 3181권

- 한국인의 생활 : 4114점

다. 시청각 자료 : 재외동포용 교육자료(Video Tape) 총 6626점(30개국 42개 공관)

- 한국어회화 I : 500점, 한국어회화 II : 498점

- 글자교실 I : 515점, 글자교실 II : 526점, 글자교실 III : 528점

- 한국의 자연 : 400점

- 한국인의 전통명절 I : 408점, 한국인의 전통명절 II : 386점

- 한국인의 전통예절 I : 446점, 한국인의 전통예절 II : 446점

- 한국의 민속춤 : 453점

- 사물놀이 : 455점

- 우리민요 춤추며 배우기 : 497점

- 한국의 김치 담그기 : 568점

4. 교재 공급상의 문제점

가. 교과용 도서 구입량 부족 : 7차 교육과정 실시로 인한 학교급별 교과서 내용 변경으로 1600여개 이상의 현지학교(한국, 한글) 교사들의 교과용 지도서 공급 요청이 많은 바, 예산 부족(총소요예산액 2억 4000여만 원)으로 전일제 한국학교에만 보내고 있는 실정임.

나. 발송수단 개선 곤란 :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 항공 혹은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지 못하고 선편을 이용하는 바, 원거리국가의 경우 현지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5. 교재 공급 방법의 보완 개선 대책

○장기적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e-book 개발 혹은 인터넷을 통해 교과서/교재 콘텐츠를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여야함. 이것이 가능해지면 기존 발송방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및 교재의 저작권 문제 해결, 전산 보안 장치 개발 등이 필요하며, 세계 각 국의 정보화 단계가 고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감.

(질 의)

대구산업정보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신분상조치 결과와 학교법인의 자체 이행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성요셉교육재단 및 대구산업정보대학에 대하여 우리 부는 2001.5.7부터 5.16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동 법인 및 대학은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교비 13억 원을 법인 등 타 회계로 전출하였고,

-본관 등 건물신축 공사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 금액에 18억 원을 임의로 증액시켜 계약하였으며,

-법인은 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약 4억 원)을 매각하여 부채를 변제하는 등 총 3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이사장, 학장 및 교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징계 16명, 경고 또는 주의 41명 등 신분상조치와 행정상조치 15건, 재정상조치 7건(약 65억 원)의 감사처분을 하였습니다.

○현 법인 및 대학 측은 우리 부 감사결과 총 34건의 처분내용 가운데 대부분을 이행하였으나,

재정상 조치 3건 14억 6800만 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조속한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질 의)

대구산업정보대학이 조속한 시일내에 법인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이사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대구산업정보대학에 대하여는 2001년 5월에 우리 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 행·재정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일부는 이행 완료되었으며, 아직 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토록 통보하였고,
 - 검찰 고발사안에 대하여는 일부는 무혐의 처리되었고, 일부는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임시이사 파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와 감사처분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金徳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경기도 고교배정 혼란과 관련하여 신입생 배정 취소사태와 신축공사 중인 학교배정문제 등에 대하여 부총리의 입장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재배정된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우리 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 업체선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생 배정 업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등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년도 개교학교 중 공사가 지연되어 타 학교를

이용하여 개교하는 학교는 15개교이며,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학교를 이용해서 개교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들 학교는 개교지연 사례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조기에 준공을 완료하여 개교토록 조치하고
- 일부 학부모들이 재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천 덕산고는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들 학교에는 우수교사 배치, 첨단 교육 기자재 지원, 통학버스 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신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고등학교 평준화는 과열 고교 입시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74학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 그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과열 고교 입시경쟁 완화 등의 성과가 있으나
 - 학급내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 곤란, 학력저하에 대한 논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고교평준화가 국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형평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우리 부에서는 고교 제도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특수목적고(103개교), 특성화고(41개교) 및 자율학교(20개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 금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자립형 사립고(5개교)와 내년의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평준화 보완 방안의 하나입니다.
- 앞으로도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 우수아를 위한 영재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 내년도에 시범운영 예정인 자립형 사립고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시범운영학교를 추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 특성화고교(41교), 예·체능고교(35교) 및 전국 농어촌 지역 고교(666교) 등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며,

-현행 제도에 의한 특수목적고교, 직업학교, 대안학교의 설립·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등학교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金貞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고등학교 평준화는 과열 고교 입시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74학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 그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과열 고교 입시경쟁 완화 등의 성과가 있으나
 - 학급내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 곤란, 학력저하에 대한 논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고교평준화가 국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형평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우리 부에서는 고교 제도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특수목적고(103개교), 특성화고(41개교) 및 자율학교(20개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 금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자립형 사립고(5개교)와 내년의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평준화 보완 방안의 하나입니다.
- 앞으로도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 우수아를 위한 영재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 내년도에 시범운영 예정인 자립형 사립고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시범운영학교를 추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 특성화고교(41교), 예·체능고교(35교) 및 전국 농어촌 지역 고교(666교) 등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며,
 - 현행 제도에 의한 특수목적고교, 직업학교, 대안학교의 설립·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등학교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 의)

제7차 교육과정이 제 제도에 오르지 못한 상

황에서 2005학년도 대입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정부는 지난 95.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97년 12월 제7차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 후 학교급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고1학년도로 확대되고 2004년에 고3학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05학년도 이후의 수능시험 개편은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98.10.19)에서도 2002학년도까지 발표키로 사전 예고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말 발표한 「개편안」은 고교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여건고려와 교사, 교육청, 대학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우리 부는 교육청, 고교와 함께 제7차 교육과정이 현장에 착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학생들도 미리 진로선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질 의)

선택과목제 도입에 따라 과목 편식 현상 해소 대책 및 학교 현장 지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 흥미, 장래 진로에 알맞게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05 수능에서는 이러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과 진로와 적성에 따른 소수 과목의 심층적 이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더라도 선택과목 중 일반 선택과목은 학생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과목 균별로 1~2개 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생의 과목 편식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총 이수 단위 중 50% 이상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학생의 균형적인 이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질 의)

2005학년도 대입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교육 근절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사교육비 문제는
 - 대학별 전형방식과도 관련되지만,
 -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학벌중심 가치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기업의 채용행태와도 관련됩니다.
- 무엇보다 학벌중심의 구조가 대학간 서열화와 결합하여 공고화됨에 따라 입학전형 상황은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 따라서 사교육비 완화문제는 사회전반적인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 우리 부는 이러한 학벌위주 문화타파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키는 특기·적성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한 것이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한 것은
 -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교육의 중심 축이 고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
 - 최근 실업교육 기피 등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생들의 학습의욕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 실제 여론수렴결과 학부모, 교사, 여론 등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 우리 부는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는 것 이외에도 실업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실업교육 육성방안」(01.11.2)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교육예산 조기집행이 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국내의 투자·소비 심리위축 등의 요인이 겹쳐 경기둔화로 제2의 IMF를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는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작년에는 매월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월 1회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동 회의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각부처가 협의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 작년도 집행점검 결과 2001년도 불용·이월액은 2000년도 1365억 원에 대비하여 65.3%인 891억 원이 감소되었고,
 - 그린벨트내 학교신설 사업을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예산은 적기에 투자하지 못하여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데에 대하여 매년도 국정감사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 ※2000년도 이월 및 불용액 : 2조 7000억 원(불용 1조 1000억 원, 이월 1조 6000억 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도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 별도의 신규사업 또는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산의 조기집행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이탈하여 사용하거나 회계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任鍾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급격한 개혁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평생을 우리 교육현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은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따라서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또한 우리 교육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5.31 교육개혁 방안의 기본철학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당사자들간의 갈등과 정책수단의 현장적합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교육개혁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생긴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 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고등학교 평준화는 과열 고교 입시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74학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 그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과열 고교 입시경쟁 완화 등의 성과가 있으나
 - 학급내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 곤란, 학력저하에 대한 논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고교평준화가 국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형평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우리 부에서는 고교 제도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특수목적교(103개교), 특성화고(41개교) 및 자율학교(20개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 금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자립형 사립고(5개교)와 내년의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평준화 보완 방안의 하나입니다.

- 앞으로도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 우수아를 위한 영재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 내년도에 시범운영 예정인 자립형 사립고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시범운영학교를 추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 특성화고교(41교), 예·체능고교(35교) 및 전국 농어촌 지역 고교(666교) 등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며,
 - 현행 제도에 의한 특수목적고교, 직업학교, 대안학교의 설립·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등학교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 의)
부처간 공동안건을 상정하고, 부처간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교육인적자원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서로서
-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등 11개 부처 장관급 회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을 통해, 관련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 하였습니다.
 - 그 예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를 이루어내었으며,
- 앞으로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인적자원정책 의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발굴하는 한편,
 - 관계부처간 이견과 쟁점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질 의)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여러 부처에서 인적자원개발업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유사·중복기능의 문제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유사·중복업무의 정책조정과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그동안 과학진흥, 청소년, 도서관업무 등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안건 :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방안/중도 탈락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계획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등을 통해 총괄·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써 - 유사·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더라도 규정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도 본질적으로는 의사양성교육과정이므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위수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의과대학은 지금까지 의예과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과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체제는 한의대, 수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입학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자에게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학위체제의 기본 원리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교육과정 운영이나 M.D-Ph.D. 과정 운영 등 현재 의과대학 교육과정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동일한 의사양성과정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학위 수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위체계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2010년경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 교육체제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학벌문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안과 함께 관련부처의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우리 부는 학교교육의 부실의 주범이 학벌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작년에 ①장기적인 학벌청산과 방향정립을 위한 학부모의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 등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②학벌문화 타파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③학벌문화 타파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학벌문화 타파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①학벌문화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②학벌을 유발하는 문화·환경 개선, ③국민의 의식 개혁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 우선 제도개선 과제로는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하며

- 학벌을 유발하는 문화·환경개선을 위해 경제단체장·언론사 간부 등 사회지도층 중 학벌문화 타파에 공감하는 인사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 또한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의 학벌 타파 추방운동 지원, 정책연구학교 운영, 학벌 타파 사이버 토론방 운영, 언론기관과의 제휴·협찬을 통한 홍보 추진 등 본격적인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의)

청년층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대학교육과 졸업 후 실무영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를 실용학문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채용관행도 수시, 경력직 위주로 바뀌고 있어 대학의 학과 등을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근 대학에서도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실습학기제 운영 등을 대학에 권고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현장수요 반영을 대학평가에 반영, 공학교육평가인증제의 도입,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행·재정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 앞으로 졸업생 취업 DB 구축,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의)
현재 사교육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기능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선 사교육 기능 중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하여는 단위학교에서 책임지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며,
 - 아울러 사설기관 모의고사 제한에 대한 대안으로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시행하는 등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서 학교교육 보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EBS 교육방송과 에듀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질 의)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상담실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담실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승진과 관계없이 전문적으로 학생 상담만을 위한 교사양성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실질적인 상담실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

하여 위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 상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97년에 종전의 '교도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 진로상담 보직교사 중 50% 이상을 상담만을 전담토록 하거나, 상담전담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원의 정원확보율이 낮은 상황에서 상담만을 전담하는 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 초등-97.2%, 중등-85.5%
- 앞으로 교원정원의 증원 노력과 병행하여 상담전담교사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점수를 승진을 위한 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교사가 학생상담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여, 상담전담교사가 아니더라도 학생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 의)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1) 정보화 소호학생에 대한 PC 보급
 - 2) 교사 연수비용의 국가지원
 - 3) 노후 PC 업그레이드 및 교체 추진
 - 4) 과목별 30% ICT활용교육 추진
 - 5) 교사 정보화 방안

<붙임>

- 1) 정보화 소호학생에 대한 PC 보급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이념의 적극적 실현
-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율을 통한 정보활용능력의 격차해소와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
-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정책적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동참기회 제공

2000년 대통령 새천년 신년사 중
관련 내용

-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

터를 국비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들 모두의 인터넷 사용료도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2. 사업 목적

○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이념 구현

3. 사업 내용

- 우수 학생에 보급된 컴퓨터 리스료 지원
 - 지원액 : 리스액 550억 원 중 177억 원
 - ※ 동 사업은 정보화추진기금으로 전액 보존
 - 지원규모 : 정보화 교육 결과 우수자 등에게 컴퓨터 5만 대 무상 지원에 따른 2002년 리스료
 - 지원기간 : 2002. 1. - 2002. 12
 - ※ 총사업기간 : 2000. - 2003.
- 인터넷 통신비 국비 지원
 - 지원액 : 49.5억 원
 - ※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 49억 5000만 원 대응 투자
 -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및 저소득층 자녀 중 PC보급 수혜자(5만 명)
 - ※ 저소득층 자녀 지원 대상 감소(고교졸업자 중 통신비 지원 비희망자 등)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SK텔레콤으로부터 PC를 지원받은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지원
 - 지원기간 : 2002. 1. ~ 2002. 12.
 - ※ 총사업기간 : 2000.10. - 2005. 9.

○ 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시·도별	배정인원	2002년 지원계획		
		PC리스료(a)	통신비(b)	계(a+b)
서울	6,153	2,271,168	609,147	2,880,315
부산	4,429	1,560,232	438,471	1,998,703
대구	2,381	783,460	235,719	1,019,179
인천	2,430	879,892	240,570	1,120,462
광주	1,811	670,376	179,289	849,665
대전	1,467	556,940	145,233	702,173
울산	808	286,432	79,992	366,424
경기	7,608	2,802,184	753,192	3,555,376
강원	2,549	941,956	252,351	1,194,307
충북	1,946	740,752	192,654	933,406
충남	2,185	749,140	216,315	965,455

시·도별	배정인원	2002년 지원계획		
		PC리스료(a)	통신비(b)	계(a+b)
전북	3,664	1,202,000	362,736	1,564,736
전남	4,254	1,455,892	421,146	1,877,038
경북	4,195	1,423,828	415,305	1,839,133
경남	3,366	1,097,616	333,234	1,430,850
제주	754	280,220	74,646	354,866
계	50,000	17,702,088	4,950,000	22,652,088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계
자체부담금	4,943	4,950	4,950	14,843
정통부지원금	21,860	22,652	13,272	57,784
계	26,803	27,602	18,222	72,627

5. 기대효과

-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정보 활용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보급 및 통신비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

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가. 저소득층 자녀 리스료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 2000년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보급한 5만대의 PC리스료 지원
 - PC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2. 추진방향

- 저소득층 자녀 5만 명에 대한 컴퓨터 보급 리스료 및 인터넷 통신비 국비 지원 계속(정보화추진기금)
- 현행 지원통신비(1만 6500원)로 전용회선(ADSL) 월정액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추진체계

- 교육인적자원부
 - 기본계획 수립, 예산(정보화추진기금) 확보 및 지원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 국비 대응투자 예산(지방비) 확보 및 지원

- 지역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 관리

4.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기금 교부 : 2002. 2월
- 실태점검 및 사업정산 : 2002. 12월
- 사업계획결과보고서제출 : 2003. 1.월

III. 소요예산 내역

1.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소요예산	자체부담금		정통부지원금		비고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PC 리스료	54,999	-	-	54,999	100	
인터넷 통신비	49,489	25,040	50	24,449	50	
계	104,488	25,040	24	79,448	76	

※2000 - 2005년까지 총사업비 임

2) 교사 연수 비용의 국가지원 방안

- 우리 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연수 및 국가 정책 목적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정보화연수가 교원의 다양한 정보화수준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 연수보다 교원의 희망에 따라 연수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선택연수를 확대하고 연수비용도 확대 지원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85억 원을 교원정보화연수비로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22억 원의 교원정보화연수비를 확대 지원하였음.

3) 노후 PC 업그레이드 및 교체 추진

2002년 학교정보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 계획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정보 인프라의 고도화 추진(05년까지)
-PC 1대당 8명⇒5명 수준으로 기기 보급 확대
-ICT활용수업이 가능토록 학교별 2Mbps 통신회선 지원
-기기 유지·보수 및 관리 지원체제 구축

□추진방향

- PC 활용계획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보급·교

체지원 : 1200억 원)

- 개별 학교의 교육환경(공간), ICT 활용수업 실적, 교원들의 ICT활용능력과 연계하여 PC 보급
-정보화소양교육⇒ICT활용 교과교육으로 전환을 위한 개별학교 실정에 맞는 기기 보급 형태 다양화

○정보인프라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관리체제 구축(유지보수 지원 : 750억 원)

- 일선학교에 전산보조원 배치를 통하여 1단계 on-site 유지·보수 강화
-2단계로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분청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민간업체와 협조체제 구축
-학교 정보화기기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예산 절감, 학교 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정보화기기 도입 검토

- 컴퓨터기술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 PC 등 다양한 컴퓨터보급 확대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보급여부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초·중등학교 PC 보급 및 유지·보수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지침 통보(02. 2)
- 초·중등학교 정보화기기 모니터링시스템 운영(02. 2)
-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 지원(02. 2)
-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02. 3) (117억 원)
- “네트워크 PC등 다양한 대체 정보화기기의 학교보급 타당성 연구”과제 수행(02. 2~6)
- 초·중등학교 정보화인프라 추진실태조사(02. 6~7)

4) 과목별 30% ICT활용교육 추진

-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 교육 내용의 강화 및 정보 활용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정보능력 배양을 위해 ‘초·중등학교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2000.8.1)을 마련하여 초·중·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이 지침에 의하면 각 교과 교육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10%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수업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안은 학교급

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사항으로 교과에 따라서는 전면 실시도 가능할 수 있음.

○참고로 우리 부의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5년에 20% 이상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5) 교사 정보화 방안

○우리 부는 교원의 「정보소양능력개발」을 위하여 97년부터 매년 전체 교원의 25%인 8만 5000명에 대하여 정보화연수를 실시하여 2000년 말로 34만 명에 대한 제1기 정보화연수를 완료하였음.

○2001년부터는 교원 정보화연수 방향을 종전의 「정보소양능력개발」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신장」으로 전환하고 연수인원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전체 교원의 33%인 11만 3000명에 대하여 제2기 정보화연수 실시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대한 정보화연수를 매년 33%씩 실시하며,

－매년 200개 우수 ICT 활용 교과연구회에 200만 원씩의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자율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2500명의 교원 ICT 활용 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ICT 활용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2002년부터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ICT 활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과별 ICT 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ICT 활용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전문화할 예정임.

(질 의)
미발령자원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와 관련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헌법재판소는 90.10.8 국립사대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당시 현재 결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국립사대출신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90.12.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91년부터 3년간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대출신자로 선발·임용토록 경과

규정을 둔바 있으며,

○95.5.25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이 청구한 「국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법적기대권등에대한헌법소원」에 대하여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근거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득권보호가 끝난 지금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재결정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90년 2월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들만 구제할 경우 87~90년까지 당시 국립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도 이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특별임용을 주장할 우려가 있고, 현재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험준비생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현재 시·도별로 충원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이 많아 즉시 채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채용할 경우 사실상 과원교사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특별법에 의한 교원임용이 계속될 경우 우수한 교원확보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원임용체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의)
만5세아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유아미술학원은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 근본적으로 「유치원」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5세아 무상교육이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화의 전단계로서 추진되므로

－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유아미술학원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되,

－무상교육기관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金敬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경기도 고교배정 혼란과 관련하여 신입생 배정 취소사태와 신축공사 중인 학교배정문제 등에 대한 입장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재배정된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우리 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 업체선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생 배정 업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등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년도 개교학교 중 공사가 지연되어 타 학교를 이용하여 개교하는 학교는 15개교이며,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학교를 이용해서 개교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들 학교는 개교지연 사례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조기에 준공을 완료하여 개교토록 조치하고
 - 일부 학부모들이 재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천 덕산고는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들 학교에는 우수교사 배치, 첨단 교육 기자재 지원, 통학버스 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신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는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법개정을 통한 학교현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당시의 책에서 비판한 내용은 교육개혁 정책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발

전방향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위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교육현실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대한 평가의 부작용 및 이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저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우리 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대한 평가는 교육의 책무성 제고와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지방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평가의 경우 현장방문 참관위원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87% 정도가 교육청 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 학교평가의 경우는 학교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대상학교 교직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평가제도가 학교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평가가 교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질 의)

제7차 교육과정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제7차 교육과정은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창의력과 탐구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 97년 정부가 국민에게 시행을 약속한 교육개혁의 핵심 사업입니다.
- 다만 현 수준의 교원, 시설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7월 20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 향후 우리 부에서는 교원, 시설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수·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새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昌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성과상여금 지급보류가 결정된 경위와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지난해에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우리 교원의 경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 상·하위 등급과 지급비율을 대폭 완화하여 모든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 개인별 성과의 평가를 통해 등급화하는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는 평가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현 교직사회의 정서상 시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금년에는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선생님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연수비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 제도는 우리 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제도 주관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한 것인 바, 그동안 2002년도에 지급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교직사회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학교공사 건설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표명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그동안 우리 부는 인사·시설분야를 비리취약 분야로 분류하고 비리단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아직도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로 물의를 빚는 등 취약분야의 잔존비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 부는 최근에 발생한 비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시설공사 자체 특별감사 실시와 기강확립을 시달한 바 있으며,
 - 지난 1.21부터 2.6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우리 부는 학교시설공사 비리근절을 위하여
 - 학교시설공사는 가능한 한 기술직이 있는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공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등 『학교시설공사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1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소집·시달한 바 있으며
 - 앞으로 감사관실 내에 『시설공사특별점검단』을 편성·운영하여 시설공사 부조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수도권 고교 재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지역 신입생 고등학교 학생 배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하여
 -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번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여 빚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 업무관련자들의 부주의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의 재배정 작업 결과 3만 7300명 중 학교가 변경된 학생은 20.7%인 7721명이고,
 - 이중 2167명은 학교시설이 열악하거나 신설학교 등으로 학생이 원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재배정 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교육여건을 최대한 개선하고,

- 출신학교장, 새로 배정받은 고등학교장, 지역 유지 및 동창회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이해·설득하도록 하겠으며,
 - 이번 재배정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 업체선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생 배정 업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등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지난해 ‘교양교육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 대학들의 교양교육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것은 교양강좌 중 전임교수 담당비율이 낮은데 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전임강사 비율을 높이고, 교양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교양교육 등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시간강사 문제 해소를 위하여
- 02~03년도에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의 국립대 교수 정원 계획을 이미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2002년도 1000명분은 증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원 확보율을 평가에 반영하여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전임교원 증원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교양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과목을 대학 스스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